



# 낙농육우산업 해결과제



김인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정축년에 해결해야 할 낙농육우산업의 과제는 많다.

지난해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많거니와 새로이 제기된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할 사안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UR협상이후 우려했던 낙농육우산업이 지난해부터 소값 폭락, 분유체화 등으로 일대 혼란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앞으로 닥칠 문제들이 더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쇠고기나 우유가 수급조정 여하에 따라서 다소간의 해결기미를 보이기도 하여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을 타개하던 종전과는 달리 이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는 안정을 기하기 어려운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값싼 외국의 유제품이 틈을 노리고 있고, 냉장 고급육이 기회만

닿으면 국내 시장을 쳐들어 오려고 베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수입품에 뒤지지 않는 축산물을 공급 할 때에만 우리 국민에게 우리 것을 사랑하도록 요구하고 신토불이를 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가 이웃처럼 가까워 지고 있고, 시장의 문이 완전히 열린 상황에서 선진 축산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것의 우수성, 나아가 우리 제도의 선진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

## 체화분유의 소진

낙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치고 재고분유를 안고 있는 조합장으로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서 고뇌 하지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조합원으로부터 원유는 정상적으로 집유해야 하고, 집유된 원유는 분유로 쌓여가고, 재고분유는 절반이하 가격으로도 팔기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낙농가 보호를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 괴로워 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듣고있다.

일부 조합의 문제로만 넘길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 우선 협동조합은 낙농가의 단체이다. 협동조합의 와해는 곧 타조합에 연쇄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낙농가를 위하는 조합체제의 붕괴는 농민 보호기능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이다. 뿐만아니라 경쟁상대로 있는 사유업체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지 못한채 지

고만다면 누가 낙농가 보호를 위한 경제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흥보부족이나 경영부실을 지적하는 소리도 있으나 우유사건의 연속적인 발생과 판매하던 원유 계약을 파기당함으로써 원유판매중단, 분유판매처의 차단 등에서 주요인을 찾을 수 있다.

성수기든 비수기든 분유생산은 불가피하고, 만들어진 분유는 2천 원대에도 팔아먹기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값싼 모조분유 수입에 따라 국산분유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모조분유 수입은 무역위원회에서 4년간 15,950톤으로 한정하여 매년 5.7%씩 확대하여 수입되도록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국산 분유소진과 병행하여 수입 쿼터를 정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면서 국산분유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향후 시행될 과제이고 이제까지의 조합재정 손실과 현재의 재고분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나마 좁은 국토에서 영세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면 아무리 열심히 땀흘려도 정상적인 원유 생산활동이 어렵고 유대지불이 어렵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업농 육성시책에 호응하여 피땀흘려 일해도 영세조합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부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재고분유이라도 최소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조치가 있어야 한다. 수입 모조분유를 들

여다 제품 만든 업체는 재미보게 되고, 국산분유 사용에 치중한 조합이 상대적인 손실을 입어야 한다면 정부의 차별적 지원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만 낙농가 보호를 위한 조합이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되고, 소속된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또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바로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 젓소가격 안정

젓소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락하고 있다.

숫소생체 가격이 연말에 2천원대까지 하락하는가 하면 송아지 가격이 2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사상 최하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젓소 가격 하락은 지난해 한우값 하락과 분유재고에 따른 수급 불균형등 낙농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97년 1월부터 실시되는 정육점의 구분 판매제도의 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젓소에 있어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육점의 구분판매는 한우, 육우, 젓소, 수입육으로 구분되지만 한우의 이미지 부각에 따른 상대적 젓소고기의 열위성 때문에 젓소값을 하락시키는 소장사들의 공간이 있는것 같다.

구분판매에 있어 젓소 미경산우와 숫소는 「육우」로 포함되고 노폐우만 젓소로 구분되어 있지만 아직 홍보가 덜되어 있고, 소비자의 인식이 미흡한 결과로 젓소값만 하락시키고 있다.

이미 협회에서는 구분판매시 젓

소값의 하락을 예견하고 92년도부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젓소전문매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었다. 젓소비육우의 경우 사실상 고깃소이고, 선진국 모두가 이를 주된 고깃소로 비육, 공급시키고 있다. 유통체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정육점에서 팔리는 쇠고기는 모두 한우로 둔갑되는 데에 애매한 젓소 사육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젓소고기는 모두 노폐우로 연상되고, 소비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함으로써 어느 정육점이나 음식점에서 젓소고기를 판매한다거나 음식을 만든다고 간판을 내걸고 있지 않다. 무조건 쇠고기는 한우로 통해야 하고 그래야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기 때문이다. 젓소 고기라고 하면 장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젓소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한우에 반비례하여 소비자의 외면을 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분판매는 어차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이고, 구분판매제도 시행 이전에 젓소 비육우의 참맛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림으로써 젓소고기에 대한 불신을 씻고 젓소값 하락을 방지하지는 것이 바로 젓소고기 전문판매장 설치의 목적이다. 물론 명칭을 적절히 작명해야 될 것이다. 「비육소」, 「육우」등으로, 젓소 노폐우의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도록 하되 고깃소로서의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협회에서는 수년전부터 농림부에 이것을 제안하고, 쇠고기 유통구조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한우전문매장 못지 않게 중요한 젓소전문매장의 설치에도 지원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외면당하고 말았다. 젓소값이 폭락한 지금까지 젓소가격 안정을 위한 어떠한 정부대책도 제시된 바 없고, 젓소전문매장 설치지원 요청에도 응답이 없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될 뿐,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지만 행정관료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미루었다가는 낙농가의 손해만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낙농가 스스로 나서야 하는 수밖에 없다. 낙농가 스스로 전문매장을 설치하고, 식당을 경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젓소도 잘 비육시키면 얼마든지 좋은 맛을 낼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는 걸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지금처럼 젓소가격이 쌀 때 젓소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만큼 재미보는 업종도 드물 것이다. 설령 구분판매 감독을 한다고 한들 계획적으로 속이기 위한 칼질을 한다면 누가 감시하며 발견할 수 있겠는가. 단속위주의 처벌이 있다지만 24시간 지켜 보면서 단속 할 수도 없고 단속 전담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다. 도덕적으로 믿어주는 경우가 허다 할 것이다. 정확하게 확인하자면 전국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물량과 판매량 합계가 일치해야만 신뢰를 가질수 있다지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식육판매업소의 불신 문제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닌 만큼 이것을 기대하고 폭락한 소값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낙농가 스스로 비육 젓소고기의

시식회를 갖고 소비자 여론을 주도할 기관, 단체를 망분하여 선사하면서 맛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기존 유통체계를 흔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우 농가들도 보호하는 구분판매제도의 정착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고 낙농가들의 적극적인 추진이 기대된다. 젓소가격안정은 젓소비육우 고기의 진가를 소비자가 인식할 때 가능하다고 본다.

한우가격은 정부가 생체kg당 5천원선 이하일 경우 수매대책을 밝힌바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소값이 농촌 경기를 좌우하는 변수인 만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문제는 한우 대책은 제시하면서 젓소가격은 절반이하 수준에 까지 폭락하여도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낙농가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될 것이다.

## 위생적인 생산활동

낙농가들이 요즘처럼 위생관념에 철저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위생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해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소비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낙농경기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농가의 고통이 그 만큼 늘어 났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있었던 각종 보도사건 중에서 우유의 발암물질 파문은 바로 그 예가 아닐수 없다. 물론 식

품의약품안전본부의 해명과 우유 소비 선전광고까지 게재하는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언제 어떤 문제로 위생문제가 제기될지 모르는 사안이다. 특히 유질논쟁 사건 이후 소비자단체들의 우유나 쇠고기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종전에는 정부 기관의 검사 발표나 언론의 추적보도에 자극을 받아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소비자단체가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검사하거나 고발하는데 단계에 와 있다. 소비자 주권의 당연한 일로 받아 들여야 하지만 그만큼 우리농민의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축산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임을 이해해야 한다. 유질논쟁의 여파로 세균수와 체세포수 하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그 래도 모자라 체세포수는 당초 97년 1월부터 50만개로 강화토록 발표되어 있었다. 짧은 시기임에도 우리 유질 개선을 낙농가의 노력이 엄청나게 컸던 점과 젓소값 폭락으로 도태의 어려움, 그리고 도축장 계류시간의 문제등 낙농가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여 2월까지 2개월간 유보하여 3월부터 실시토록 농림부가 양해하였다.

그동안 기준미달 농가에서는 어렵더라도 체세포수 줄이는 작업에 동참해야 될 것이다. 소비자 단체의 반발과 우유에 대한 이미지문제 등 문제점이 지적되긴 했어도 조금이나마 낙농가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2개월이나 유보된 것임을 이해했으면 한다.

우유 뿐만아니라 쇠고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잔류물질 검사가 강  
화되고 있고 수입되는 쇠고기와의  
비교를 통해 평가 되므로 사료사용  
지침, 예방치료약에 대한 지침, 그  
리고 환경적 위생등 사양관리에 있  
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축장 위생문제,  
냉장유통체계로의 개선문제, 정육  
점에서의 위생문제 등 농가단계 이  
후의 위생체계에도 개선대책이 있  
어야한다.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라면 생산, 유통, 판매의 전과정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체계로 정착  
되어야 한다. 우리 소사육 농가의  
과제가 더욱 늘고 있지만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이다.

### 낙농제도의 개선

낙농제도의 개선은 이미 합의적  
단계를 거친 상태이지만 법적인 제  
도의 정착을 위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낙농진흥법 개정이 낙농가의  
요구로 국회의원이 서명 날인하여  
국회에 접수되고, 국회 공청회를  
거친 상태에서 계류중에 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의 이해  
를 갖도록 하였지만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회기가 마감되었기  
에 임시국회 개원을 기다리고 있  
다. 낙진법의 개정만큼 논의 과정  
도 길고 논쟁이 뜨거운 예는 우리  
나라 법개정사상 찾기 어려울 것이  
다. 그 만큼 낙농가와 유업체와의  
거래관계는 복잡하고 이해에 얽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미 원유  
검사의 객관성 보장 문제는 이론이

없는 상태이다. 다만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에 집중되지만 국가기관  
이 책임지되 구체적인 실무는 논의  
될 것으로 본다. 낙농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성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집유 중복선을 줄여 불류비를  
절감하고 원유가 과부족시에도 혼  
란없이 납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도 이견이 없다. 다만 종전  
까지 원유가 다소 부족하던 시절이  
있고 유업체로부터 여러가지 지원  
이나 보조금 형식의 공식, 비공식  
유대를 받던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까하여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유 부족시에 유업체의 선심공  
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남을 때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적인 문제점 역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유대 이외의 관  
행으로 받아 오던 금전적 거래는  
공식적인 원유대로 흡수하여 현실  
화 시켜야 한다. 이미 농림부의 약  
속이 있었다. 유업체와의 논의를  
거친다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급조절의 문제가 법개정의 난  
제인 만큼 수급조절기구 설치를 두  
고 논쟁이 뜨거웠었다. 수급조절  
즉 수요의 최대한 확대와 공급의  
최소한 제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조정적 기능을 가지도록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은 10년 가까  
운 시간동안 내려진 결론이다. 수  
급조정 기구는 수요창출과 아울러

젖소의 경우 전업농을 강조하지만  
규모화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분뇨를 자원화하여 처리토록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여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으로  
농가 경영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족노동형 전업농 육성은 강조했지 부수되는  
분뇨처리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칫 소사육 농가를  
전과자로 모는 경우가 허다히 나타날 수 있다.

생산 계획도 제시되어야 낙농가 보호는 물론 원유 수요자인 유업체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계약기간동안 낙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고, 원유 남는 분량의 분담을 합당하게 조정하여 영세농가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급조정기구는 사단법인 형식으로 최소화하여 존치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이다. 물론 이 기구에서 법에서 규정한 각종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낙진법의 개정안은 낙농진흥시책을 정부에서 마련토록 하고 예산지원을 뒷받침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진법개정에 대해 새삼 거론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수 있다. 다만 낙농가의 이해와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낙진법개정이 낙농진흥의 절대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해가 얽혀있는 문제에 있어 수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 낙농가가 원유생산 활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합의로 마련된 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법개정이 되면 후속조치 마련에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가령 시행령 마련과 시행규칙 마련, 낙농진흥회 정관마련, 그리고 낙농진흥회 준비위구성, 기타 세부 업무의 논의가 뜨거워 질 것이다. 최대한 낙농가 권익이 보호되도록 협회가 앞장서야 할 과제이다.

**낙농육우산업 기반 안정 사업**

소값의 안정이 축산경기 나아가

농촌 경기전반의 안정과 직결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소값 안정에 정부가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우의 경우 고급육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소비자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구분판 매제도가 정착되고 고급육이 제대로 전달되어 소비자가 한우고기 맛을 이해하도록 해야겠다.

그러자면 소비자 단체와의 유대 강화와 함께 소비자 스스로 감시하고 정육점에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도록 이해를 촉구해야 한다. 고급육 생산기술을 농가들이 익히도록 기술지도, 경영개선등 전문적인 부분을 산학연 협동체제를 유도해 주어야 한다.

젖소의 경우 전업농을 강조하지만 규모화에 따른 분뇨처리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분뇨를 자원화하여 처리토록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여 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등으로 농가 경영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가족노동형 전업농 육성은 강조했지만 부수되는 분뇨처리 대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칫 소사육 농가를 전과자로 모는 경우가 허다히 나타날 수 있다. 법적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더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고 보면 낙농육우농가의 희망을 갖아가는 사안이다.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점은 이해가지만 정부가 지켜야 하는 산업적 차원에서 지원시책이 있어야 마땅하다.

가공업무 일원화는 더 이상 숙제로만 남겨둘 수 없다. 원유단계

이후의 업무관장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각종 유유관련 사건이 터져 나왔다. 쇠고기 역시 도축장 이후의 단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므로 제도정착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따라서 농림부로 일원화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어떻게 반대의 소리를 잠재우고 이관시킬 것이냐가 현실적 과제이다. 우선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정부, 특히 농림부와 국회, 정당에 여론을 전달하고 당위성을 강조 할 것이다. 이미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 농림부 이관으로 결정나도록 협회가 앞장섰으므로 본회의 결론 역시 협회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배합사료 가격은 수입 원료품목가 하락 추세에 맞게 인하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1월중에 1차 인하, 그리고 연중에 2차 인하, 7월에 부가세영세율 전면실시 등으로 농가의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TMR사료 역시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은 말할 나위 없다.

TMR제도의 양성화 지원조치 마련을 위해 협회가 주도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 축협의 협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소사육 농가의 땀흘리는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최소한의 필요사항에 대해 정부의 바람직한 제도개선과 함께 우리 농민의 주름이 가시는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㉞